

〈루마니아〉

# 혁명 및 체제전환과정 사례집

---

통 일 원

- 이 자료는 루마니아 사회주의 체제전환과정 연구를 위한 현지출장시 수집한 자료들과 기발간된 국내 자료들을 정리, 발간한 것입니다.
- 통일원은 통일정책 개발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구소련 및 동구권의 몰락이후 각국의 사회주의 체제전환 과정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 본 자료가 사회주의 체제전환 과정 및 남북한문제 해결에 관심있는 분들과 관계전문가들의 연구자료로 적극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통 일 정 책 실

## 《 목 차 》

I. 혁명('89) 이전 -----	1
1. 공산정권 수립 -----	1
2. 차우체스쿠 강압통치 및 족벌정치 실태 -----	3
3. 경제상황 및 주민들의 생활수준 -----	6
4. 공산당내 개혁추진세력 활동 -----	11
5. 주민들의 억압체제에 대한 순응정도 -----	12
6. 반체제 활동 및 시민사회 존재여부 -----	14
II. 루마니아 혁명과정 -----	18
1. 혁명의 발단 및 전개과정 -----	18
2. 루마니아 혁명의 주도세력 -----	21
3. 유혈사태 수습과정 및 구체제인사 처벌 -----	25
III. 신정부 출범후 체제전환과정 -----	27
1. 정치적 변화 -----	27
가. 신정부 출범후 정치동향 -----	27
나. 주요 정당현황 -----	34

2. 경제개혁의 추진	38
가. 경제개혁정책의 기초 (집진주의 대 충격요법)	38
나. 경제개혁기(1990-)의 경제 각분야 현황	41
다. 가격자유화	44
라. 환율의 단일화와 레이화의 내적 태환성 보장	46
마. 건축제정과 세계개혁	47
바. 금융제도의 개혁	49
사. 사유화 정책	51

#### IV. 루마니아 혁명·체제전환 평가----- 58

1. 혁명·체제전환 사례비교	58
가. '89 동구혁명의 원인	58
나. 고르바초프 개혁에 대한 동구권반응의 차이	59
다. 혁명의 전개과정상의 차이	62
라. 동구 각국 『시민사회 활성화 정도』의 차이	64
마. 혁명직후 등장한 정권의 성격상 차이	66
2. 북한과 루마니아의 유사점·차이점	67
가. 북한과 루마니아의 유사점	67
나. 북한과 루마니아의 차이점	70

※ 사회주의 체제전환 유형

# I. 혁명('89) 이전

## 1. 공산정권 수립

- 2차세계대전 이전까지 루마니아 공산당은 동유럽에서 가장 미약한 세력이었음
  - 루마니아 계층구조로 볼때 공산당의 사회적 기반은 취약했으며, 다수인 농민층이 공산당을 지지하지 않았음.
  - 루마니아 공산당은 당시 코민테른의 민족정책을 지지하며 소련의 영토적 이익을 옹호했으나, 친라틴·반슬라브적인 민족적 전통이 강했던 루마니아인들은 공산주의를 민족적 배신과 동일시 하는 경향마저 있었음.
- 1944년 군부·관료 등 각계세력을 포함한 민주전선이 창설되었으나, 소련군이 진주하여 친공산세력을 구축하기 시작했음
  - 1944년 1,000명에 불과했던 공산당원 수는 1948년까지 80만명으로 증가했으며, 1946년 총선에서 공산당 연정이 압승하여 공산당의 일당독점체제가 구축됨.
  - 1947년 왕정이 폐지되고, 1948년 헌법제정과 동시 루마니아 노동자당(RWP)이 집권당이 됨.

- 데지(Dej) 서기장은 수차례의 숙청을 통해 권력기반을 공고히 하는 한편, 후르시초프가 등장하기 전까지 스탈린주의에 입각한 대내외 정책을 펼쳐나감.
  - 대외적으로는 소련의 노선에 충실히 따르며 국제공산주의에서 소련의 지도적 역할을 인정했음.
  - 사회·경제적 발전전략으로는 소련식 모델에 따라 농업의 강제집단화, 급진적이고 외연적인 중공업위주 공업화정책 추진, 대중교육을 통한 동원체제 구축에 주력했음.
- 1956년 이후 후르시초프 등장과 함께 루마니아와 소련간에 스탈린주의적인 경제발전 전략의 지속추진과 루마니아 자주성을 둘러싸고 갈등이 시작되었음.
  - 1960년 후르시초프는 탈스탈린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코메콘의 경제통합과 국가별 전문화를 증대시키는 정책을 추진했으나, 루마니아는 이를 자국의 경제적 주권 포기, 스탈린주의적 중공업우선 전략의 포기로 간주하여 이에 반대했음.
  - 루마니아 공산당은 1964년 4월 『자주선언』을 통해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관해서 다른 나라, 다른 공산당이 결정할 수 없다. 해당국가의 마르크스-레닌주의 각 정당만이 결정할 수 있다. 사회주의 건설의 형태와 방법을 작성·선택·변경하는 일은 각 사회주의 국가의 주권적 권리”라고 주장함.
  - 루마니아 공산당은 대내적으로 전통적 스탈린식 경제정책 및 대내통치 방식을 관철시키면서, 대외적으로는 소련으로부터 자주성을 선언했으며, 이러한 정책은 루마니아 주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았음.

## 2. 차우체스쿠 강압통치 및 족벌정치 실태

### 가. 집권과정

- 데지 서기장은 사망전 차우체스쿠가 집권할 것을 우려, 유언으로 게오르그 아포스톨을 후계자로 지명하려고 하였음
- 그러나 차우체스쿠는 이를 사전에 간파, 마우러, 보드나라스와의 비밀협상 통하여 데지 사후 마우러를 수상으로 보드나라스를 당 제2인자로 임명한다는 밀약을 조건으로 정치국원회의에서 서기장으로 선출됨.

### 나. 집권기간별 통치

- 제1기(1965~1971)
  - 『Re-Romanization』 을 슬로건으로 하는 강력한 민족주의를 표방하면서 소련으로 부터의 정치적·경제적 독립정책을 추구함
  - 특히, '68년 소련의 체코슬로바키아 침공을 강력히 비난하는 한편 유고의 탈소련 정책을 지지함으로써 미국·영국 등 서방과 제3세계 국가로 부터 좋은 평가를 얻게됨.
  - 이 기간동안 차우체스쿠는 자신의 지도자로서의 입지를 강화시키기 위한 치밀한 각본에 따라 대국민 유화정책을 펼침

○ 제2기(1971~1980)

- 1971년 루마니아 문화혁명을 주도하면서 모든 외국문화 수용을 거부하는 극단적인 민족주의 정책 표방
- 1974년 당서기장 뿐 아니라 대통령에 취임함으로써 확실한 정권의 토대를 마련
- 집권2기의 차우체스쿠는 1971년초 북한과 중국방문을 통하여 루마니아에 적합한 공산주의 사회건설의 모델을 찾았다고 생각하였으며, 엘레나 역시 중국의 강청을 자기자신의 모델로 여기고, 직접적으로 국사에 간섭하기 시작
  - ※ 혁명 이후 정부수반이 된 일리에스쿠는 차우체스쿠에 대한 김일성의 영향에 대해 “북한은 차우체스쿠에게 대단한 감명을 주었다. 북한은 완전한 전체주의의 완벽한 모델이었다. 루마니아에 돌아와서 차우체스쿠는 루마니아식 문화혁명 정책을 입안했다” 라고 회고했음.

○ 제3기(1980~1987)

- 제2기동안 추진해 왔던 서방 외채에 의한 『강제적 산업화정책』의 부정적 영향으로 루마니아는 심각한 외채상환 문제에 봉착
- 엘레나를 제1부수상으로 임명하는 등(1980) 노골적 족벌정치를 추구
- 특히 차우체스쿠가 지병등으로 통치에 지장이 발생하게 되자 엘레나는 실질적인 제1인자로서의 권력을 휘두름.



- 대외정책에 있어서도 서구뿐 아니라 주변 동구국가로 부터 인권문제 등에 관해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이를 무시, 고립주의·폐쇄주의 정책을 추진

○ 제4기(1987~1989)

- 당·정의 고위관료에 대한 불신감으로 정권기반을 비밀경찰에만 의존하는 등 루마니아내에서도 자신을 고립시키는 정권말기적 현상을 드러냄.
- 소련의 개방·개혁정책을 사회주의에 대한 배신이라고 하면서 대내적 선전·선동활동을 극단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고문·협박을 통한 대내적 강압정치를 시행함.

다. 비밀경찰(세쿠리타테)을 통한 억압정치

- 세쿠리타테는 인민의 모든 생활에 개입하여 인민들이 체제에 순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연출하는 주역을 맡음.
  - 최첨단 장비를 동원, 도청·대국민 심리전·악성소문 유포를 통하여 인민을 철저히 감시하고, 협박·고문·살인 등을 통하여 인민을 체제에 순응시킴.
- 세쿠리타테는 루마니아에 대한 국내외의 사실적 정보를 수집·평가하여 차우체스쿠에게만 보고하였으며, 이를 역으로 대국민 억압 수단으로 활용함.

- 혁명기간중에도 정규군은 친혁명 세력으로 돌아섰음에도 불구하고 세쿠리타테는 차우체스쿠 사망시까지 네러행위를 통한 독재정권의 재집권을 시도했음.

### 3. 경제상황 및 주민들의 생활수준

#### 가. 1960~1980 : 성장기

- 차우체스쿠 집권(1965)이후 1970년 중반까지는 중공업 우선정책에 의해 매년 두자리 성장율을 기록하는 등 급속한 경제적 발전 달성
  - 하지만 경제성장이 서구의 외채도입에 의한 무리한 중공업화 정책에 의한 것으로 산업부문간 불균형 현상은 심화됨
  - 대외무역면에서는 기계설비, 원자재를 수입하고, 농산물 및 석유를 가공하여 수출하는 정책을 추진했음
  - 1970년대 이후 국제적 원자재가의 급등으로 만성적 적자현상이 심화되면서 IMF 및 세계은행가입(1972)으로 서구의 자본을 끌어들이려 하였으나, 이는 외채부담을 가중시켜 1980년대이후 기아적 농산물 수출에 까지 이르게 됨.
- 루마니아는 1970년 중반이후 서방으로부터의 기계수입이 늘어났으나 이를 변제할 외화획득원을 확보하지 못한채, 1973년과 1978년의 석유파동으로 인한 서방세계의 경기침체로 경제가 어려워짐

- 산유국인 루마니아는 석유관련 산업을 중심으로 경제발전 전략을 수립하였으나 1970년말 이후 산유량이 격감하면서, 기존 석유관련 산업시설을 제대로 가동치 못하는 등 경기침체에 직면.
- 루마니아의 대 코메콘 정책은 후르시초프 등장 이전까지는 충실히 소련을 중심으로한 동구경제권에 충실히 따르는 정책을 추진하였음.
- 그러나 『자주선언』 이후 소련의 루마니아에 대한 원료 공급지 역할의 강요에 반발, 풍부한 광물자원을 이용한 고도경제성장을 목표로 하는 독자적 경제정책 추진
- 한편, 1970년대 중반이후, 에너지의 대외의존도 상승과 심각한 외화부족에 따라 저가의 에너지 공급원으로써의 소련의 중요성을 인식, 무역에서의 코메콘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

#### 나. 1980~1989 : 쇠퇴기

- 1981년이후 루마니아 정부는 자력갱생 원칙에 입각한 『외채상환 총력정책』을 추진, 심각한 소비희생을 감수하면서 식료품과 에너지 수출을 급격하게 늘렸음.
- 이에따라 1980년대 전기간에 걸쳐 식료품 부족현상과 에너지 배급제가 실시되어 주민들의 궁핍화현상이 일상화 됨

- 중화학공업 우선정책의 한계와 공업생산 감소로 1985년부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
  - 특히 공업부분 생산이 1988년과 1989년에는 각각 전년 대비 3.2%, 5.3%로 격감
  - 무역수지 부분에서는 국민의 기아를 담보로 하는 수출우선 정책으로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이는 차우스체쿠 정권의 외채상환책의 일환일 뿐이었음
  
- 이러한 주민생활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루마니아 정부는 스탈린주의적 경제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았으며, 경제능력을 넘어서는 과대망상적 프로젝트들을 추진하였음.
  - 중공업분야의 공장신설은 지속되었지만 경제부문간 불균형은 극심해졌고, 투자효율은 격감했으며, 교통·통신 등 사회간접자본과 경공업 분야의 고정자본은 극도로 마멸되었으며, 농업은 거의 파산하였음.
  
- 차우체스쿠 정권은 물가안정, 실업부제, 외채소멸 등이 경제적으로 자랑했지만,
  - 이는 국내소비와 투자의 억제, 강력한 수입규제, 국내 생산 소비제품·식료품 수출등 국민생활수준 저하를 희생으로 한 결과라 할 수 있음.
  - 이러한 기아수출정책으로 벌어들인 외화를 정권 과시차원의 낭비성 기념물 제작에 투입함으로써 국민생활은 더욱 피폐됨.

- 반면에 경제부실의 책임이 각 개별기업에 전가되고, 차우체스쿠의 『현지도』를 통해 기업의 계획과 목표가 세워짐에 따라, 루마니아 경제는 개인승배에 입각한 고도의 명령경제체제화 하여 갔음.
- 현실과 동떨어진 허위보고가 중간관리층에 만연하였고, 관리층은 더욱 수동적이 되어 갔으며, 정권의 경제에 대한 통제는 더욱 심해졌음.

- 1979년 11차 당대회에서 당원로인 콘스탄틴 파블레스쿠는 당의 차우체스쿠에 의한 사당화를 비판하면서 차우체스쿠의 당서기장 선출에 반대

- 파블레스쿠는 내회당의 추방당함.

- 석탄산업상이었던 비르질 트로핀은 차우체스쿠의 무리한 화력 발전소 건설을 비판하다가 당에서 축출된 후 사망

## 5. 주민들의 억압체제에 대한 순응정도

- 소비수준의 점진적 저하, 궁핍생활의 일반화, 광범위한 정치적 부자유 등 주민들의 반항요인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동구권 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주민들은 대체로 순응적이었음.

- 전사회를 통제하는 감시망은 주민들간의 불안·불신을 유포시켰으며, 주민들의 의사소통을 극소화시켜 억압체제에 대항할 어떠한 정치적인 의사형성도 불가능하게 만들었음.

- 루마니아는 동구권내에서 가장 철저한 경찰국가였는데, 혁명 후 한 비밀경찰요원의 양심선언에 따르면 루마니아 국민 7명 중 한명은 경찰의 정보원이었음이 드러났음

- 공산당은 당 정책집행과 관련하여 국가기구, 공공조직, 대중의 콕단체를 완전하게 장악하고 있었던 바, 전체주민에 대한 당원의 비율이 사회주의권중 최고 수준이었음.

※ 1980년대 중반에 전체인구의 15%가 당원(직업을 가진 인구의 32.9%)이었고, 노동자의 55.67%가 당원이었음.

○ 주민의 일반적 궁핍화는 저항을 촉발시키기 보다 주민의 정치의식 마비를 극대화시켰음.

- 단순한 육체적 생존확보를 위해 개인은 자기중심적이고 탈정치화되어 갔기 때문에, 주민대중은 경제사회적 궁핍에 대해 책임있는 자에게 도전할 만한 에너지와 여유, 정신적 사고능력을 가지지 못했음.

○ 루마니아에서 차우체스쿠에 반대하는 세력의 형성을 마비시켰던 요인중의 하나는 루마니아 민족주의를 차우체스쿠가 잘 이용한데 있음.

- 루마니아 국민들은 수세기동안 오스만 터키와 러시아에 의한 지배를 받아 왔으며, 지정학적인 위치상 끊임없이 외침에 시달렸기 때문에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했음.

- 차우체스쿠 정권은 국민의 지지를 배경으로 소련에 대항하는 정부였으며, 대다수 루마니아 주민들에게 차우체스쿠는 국가의 자주성을 구현하고 있는 절대자였으므로, 정권에 반대한다는 것은 국가의 자주성에 반대하는 것으로 많은 주민들이 생각했음.

## 6. 반체제 활동 및 시민사회 존재여부

- 차우체스쿠는 사회내의 모든 개인·집단 등을 중앙의 의지에 따라 동원되는 체제로 통합시키기 위해, 포괄적 감시망과 억압 기구를 통해 사회내의 자율성과 인간적 유대를 파괴했기 때문에, 대중은 존재했으나, 의식을 가진 시민사회집단은 존재하지 않았음.
  - 오직 수령(Conductor)인 차우체스쿠의 지시에 의해서만 움직일 수 있는 거대한 기계적인 체계로서 강요된 안정·질서를 유지하고 있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안정의 이면에는 정책과 정권에 대한 광범위한 수동적 저항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저항은 간헐적인 소요사태로 나타나기도 했으나 금방 진압되었었음.
  - 1975~80년간에 인권·종교운동, 1977년에 자우계곡 노동자 파업이 있었고, 1980년대에 소규모 농민폭동과 학생시위가 있었으나 미미했음.
- 루마니아 사회자체가 식민사회와 왕정을 거쳐 바로 공산주의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건전한 시민사회가 형성되지 못했다는 것이 차우체스쿠 정권이 장기간 집권할 수 있는 주요 원인이 되었음.
- 혁명이전까지 비교적 대규모적·조직적인 형태로 벌어진 소요사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가. 인민의 소요

○ 시기 : 1987.11.15

○ 지역 : 브라쇼브(제2의 공업도시)

○ 개요

- 지방선거일 시내에 모였던 1만명 가량의 노동자들이 갑자기 브라쇼브 시내의 광장에 모여들어 『독재정권 철폐』를 외치며 경찰과 충돌
- 시위노동자들이 시공산당본부 건물에 난입 차우체스쿠 부부의 초상화와 문서등을 불태우며 시전역으로 확산

○ 원인

- 『계획완성도에 따른 임금지불』이라는 일괄 임금정책에 따른 실질적 임금의 1/3 하락
- 『계획완성도에 따른 임금지불』이란 국내시장 위축과 국제경기의 하락으로 각 공장마다 주문이 거의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실질적인 임금하락으로 귀결

○ 차우체스쿠 정권의 대처

- 약 천명의 군병력이 투입되었으나 소요 노동자에 의해 압도되자, 차우체스쿠는 고위 군장성 및 세쿠르타테 병력을 동원 소요 주동자를 체포, 소요를 물리적으로 진압

- 브라쇼브의 노동자 소요는 더이상 루마니아 인민이 폭압정치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용기를 불어 넣었으며, 차우체스쿠 정권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태의 도전도 용납치 않는 계기가 됨으로써 더욱더 정권과 국민사이의 괴리가 심화됨.
- 이후 차우체스쿠 정권에 대한 산발적인 소요사태는 있었으나 조직적인 반체제 활동은 혁명직전인 1989년 3월의 당원로들에 의한 6인 서한(The Letter of Six) 사건이 발생하기까지 거의 없었음.

#### 나. 6인서한(The Letter of Six) 사건

- 시기 : 1989. 3.10
- 서명자(6명)
  - 전 정치국원 게오르그 아포스톨
  - 전 노조위원장 알렉산드루 바블라데아누
  - 전 정치국원 코르넬리우 마네스쿠
  - 전 외무장관 콘스탄틴 파르블레스크
  - 당 원로 그리고레 라케아누
  - 전 『스킨테이아』 편집장 실비우 브루칸
- 개요
  - 당원로들이 차우체스쿠에게 보내는 공개적인 서한을 통해 차우체스쿠 정권을 비판하고 그 내용이 외국언론매체를 타고 보도되면서 루마니아내에도 알려짐.

○ 주요내용

- 인권보장과 헌법준수 요구: ① 강제적 주민이주정책 철폐, ② 외국인과의 접촉 허용, ③ 전시성 건물 건설 중지, ④ 세쿠리타테의 인민 억압 중지, ⑤ 노동시간 준수, ⑥ 우편·통신의 자유보장

- 계획경제 철폐
- 농업피폐 대책 강구
- 소수민족 억압정책 중단
- 대외 고립주의 정책 중단

- 이러한 요구조건이 받아들여질 경우 정부의 개혁정책에 동참할 수 있음을 천명하였으나, 관련자 모두가 비밀경찰에 의해 체포·지방으로 추방당하였음.

## II. 루마니아 혁명과정

### 1. 혁명의 발단 및 전개과정

- 루마니아는 고르바초프의 개혁·개방 정책을 거부하면서, 국제 사회로부터 더욱 고립되어 갔음.
  - 1988년 6월 당중앙위 연설에서 차우체스쿠는 소련식의 개혁 거부 및 다당제 불용선언을 했음.
  - 고르바초프는 루마니아 공산당내 반 차우체스쿠 세력들의 당내개혁 지원 요청에 대해 타국의 내정에 간섭치않는다는 소련의 대외정책의 원칙을 설명하면서도, 루마니아의 개혁을 심정적으로 지원했음.
- 국내 인권탄압 및 소수민족 탄압으로 주변국(헝가리)과의 분쟁이 발발했으며, 서방의 대루마니아 규탄이 심화되었음.
- 1989년 11월 당 대회에서 당 서기장으로 차우체스쿠가 6번째 재선되면서 국민들의 대정부 비판이 고조되고 국내정치의 불안이 가중됨.
- 차우체스쿠 정권의 헝가리 국경 근처의 티미쇼아라의 헝가리계 개신교 목사인 라즈로 퇴케스 추방기도에 대해 소수신자들이 반발함.

- 퇴케스 목사에 대한 추방 소문이 급격히 번지면서 수많은 시민이 시위에 참가함.('89.12.16)
  - 시위 초기에는 친 퇴케스 구호가 주종을 이루었으나, 시위가 격화되면서 차우체스쿠 정권퇴진, 고르바쵸프 및 페레스트로이카 찬양 구호로 변화함.
  
- 경찰과 소방병력이 시위진압에 나섰으나 시위군중이 공산당사에 난입, 폭력시위로 격화되자 루마니아 당국은 즉각 정규군과 쿠리타테 병력을 급파, 시위군중에 대한 발포로 다수의 희생자 발생함.('89.12.17)
  
- 티미쇼아라에서의 폭력진압 소식이 전국으로 번지면서 아라드, 시비우, 클루쥬 등 도시에서 동시 다발적 폭력시위가 발생함.('89.12.17)
  
- 차우체스쿠가 소집한 정치집행위원회에서 차우체스쿠가 직접 발포명령을 하달하였고, 회의참가자 누구도 이에 반대하지 못함.('89.12.17)
  - 차우체스쿠는 시위에 대한 폭력진압을 명령한 후 예정된 이란 방문을 위해 출국('89.12.18)
  
- 차우체스쿠는 사태악화로 급거 귀국, 대국민 방송 ('89.12.20)
  - 시위사태의 원인을 헝가리가 주도한 외국의 간섭과 테러리스트의 개입으로 전가하고,

- 시위사태의 배후 조정자로 소련과 서구국가들을 지목하면서, 자신만이 사회주의의 구원자임을 주장함.
- 차우체스쿠는 공산당 당사 광장에서의 관재 시위로 사태수습 노력을 기울였으나 시위참가 군중들이 돌연 차우체스쿠 타도를 외치는 등 반정부 시위로 변질됨.('89.12.21)
- 차우체스쿠는 정치집행위원회를 소집한 후 전국에 계엄령 선포함.('89.12.22)
  - 12.22 정오경 이미 시위진압 군대가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시위군중과 합류, 대통령궁으로 진격하자 차우체스쿠 부부는 당사건물을 탈출하였으나 투르고비시테에서 체포됨.
- 차우체스쿠 정권붕괴후 차우체스쿠 추종자들의 시내 게릴라전으로 사상자가 늘면서 상황이 불투명해짐.
- 구국전선(NSF) 중심으로 구국위원회(위원장 전외무장관 마네스쿠)가 공식 출범하면서 사태수습이 시작됨.('89.12.23)
- 차우체스쿠 추종자들의 계속적인 테러활동을 중단시키기 위해 구국위원회 지도자들은 차우체스쿠를 재판에 회부 처형키로 결정함.('89.12.24)

- 차우체스쿠 처형이후 그 추종자들이 대부분 투항하거나 잠복하여 유혈사태는 진정국면으로 돌입됨.(’89.12.25)
- 그러나 투항하여 체포된 세쿠리타테 병력들 대부분이 군부에 의해 대부분 석방되어, 이후 군부내 세력으로 계속잔존, 혁명 이후 독재체제 청산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 2. 루마니아 혁명의 주도세력

### 가. 『구국전선』의 성격 및 구성

- 『구국전선』의 존재시기에 대한 논쟁은 밀리타루장군이 구국전선 회의석상에서 『구국전선』이 혁명발발 6개월전에 이미 존재했었다는 발언이 프랑스 TV에 방영되면서 발생하였으며, 이는 루마니아 혁명의 성격에 대해 『구국전선』에 의한 쿠데타설로 연결되었음.
- 밀리타루장군의 발언은 '89.6월의 제12차 공산당대회에서 부카레스트대학의 알렉산드루 멜리안 교수가 작성한 서한이 『구국전선』 명의로 제출되었다는 것에 근거
- 그러나 『구국전선』의 핵심인 일리에스쿠, 일리타루는 멜리안 교수를 전혀 알고있지 못했으며, 로만이나 부루칸은 1989.6월 당시 전혀 정치활동이 불가능 하였다는 면에서, 『구국전선』의 1989.6월 존재설은 서방언론에 의한 과장보도로 보임.

○ 구국전선 출범은 1989.12.22의 구국전선 명의의 대국민 민주화 선언 낭독시 최초로 공식명칭으로 사용되었으며, 이때 『구국전선』 구성 명단도 공식 발표되었음.

○ 『구국전선』 (Council of National Salvation Front)의 구성

- 집행부(Executive Bureau)

- 이온 일리에스쿠(의장): 구공산당 간부, 1980년대 숙청
- 두미트루 마질루(수석 부의장): '89년까지 구공산당 간부로 활동하다가 혁명직전 루마니아 인권문제를 UN인권위에 고발
- 카지마르 이오네스쿠(부의장): 소장 혁명그룹 지도자
- 카를 키랄리(부의장): 구공산당 간부, 1970년대 숙청
  
- 단 마르티안(서기): 구공산당 간부, 1970년대 숙청
  
- 보그단 테오도리우(위원): 소장 혁명그룹 지도자
- 바실리 니차(위원): 소장 혁명그룹 지도자
- 실비우 부르칸(위원): 구공산당 간부, 차우체스쿠 집권이후 반차우체스쿠 활동
- 게오르그 마놀레(위원): 소장 혁명그룹 지도자
- 이온 카라미트루(위원): 구공산당 간부, 1970년대 숙청
- 니콜라이 라두(위원): 구공산당 간부, 1970년대 숙청

※ 11명 집행위원중 일리에스쿠 의장 등 7명이 구공산당 간부 출신이나 마질루를 제외하고는 70년대 이후 숙청되어 차우체스쿠 정권에 반대한 인물들이며, 이오네스쿠 부의장 등 4명은 민중시위를 주도한 소장 혁명그룹 지도자들임



- 실행위원회 (Working Committees)

- 헌법, 법, 인권 : 두미트루 마젤루
- 외 교 : 실비우 브루칸
- 경제재건 : 보그단 테오두리우
- 교육·과학 : 게오르그 마놀레
- 소수민족 : 카를 키탈리
- 행정조직 : 니콜라이 라두
- 환 경 : 카지마르 이오네스쿠
- 문 화 : 이온 카라미트루
- 조 직 : 마하이 몬타누(Mihai Montanu)
- 공공관계·언론 : 단 라들레스쿠(Dam Radulescu)
- 청 년 : 바실리 니차

※ 이온 일리에스쿠 『구국전선』 의장 주요이력

- 생년월일 : 1930. 3. 3
- 학 력 : 부카레스트 공대 전자공학부 졸업  
모스크바 에너지 연구소 졸업
- 경 력
  - 1955 에너지연구소 연구원
  - 1967 청소년부 장관
  - 1971 루마니아 공산당 중앙위원회 선전담당 서기  
(차우체스쿠 서기장과 불화로 티미스지방으로 좌천)
  - 1979 국가수력위원회 위원장
  - 1984~1989 동 직위해임후 비밀경찰 감시대상
  - 1989.12.22 혁명직후 구국전선 위원장으로 피선
  - 1990. 5.22 대통령 단선
  - 1992.10 대통령 재선(임기 4년)

#### 나. 시민단체, 국민들의 참여정도

- 1989.12.16부터 12.22 차우체스쿠 정권 붕괴시까지 시민단체·국민들의 혁명에의 참여 및 구국전선내 영향 정도는, 차우체스쿠 정권 붕괴이전에 루마니아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민단체조차 존재하지 않았다는 면에서 미약하였다고 할수 있음.

#### 다. 외부세력의 개입여부

- 티미쇼아라에서의 시위발생시 차우체스쿠 정권은 시위를 헝가리가 사주하여 발생했다고 주장하였으며, 『구국전선』의 신정부 출범때까지 루마니아 혁명이 소련의 지원에 의한 쿠데타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음.
- 그러나, 루마니아 혁명 발생이전, 반 차우체스쿠 인사와 고르바췌프의 비밀 회동시에도 고르바췌프는 소련의 타국 내정 불간섭원칙을 천명하면서 소련의 도움요청을 거절

### 3. 유혈사태 수습과정 및 구체제인사 처벌

#### 가. 유혈사태 수습과정

- 『구국전선』은 12.23일 ① 정치범 석방 ② 광범위한 사면 ③ 낙태금지 철폐 ④ 에너지 가격인하 등의 즉각적인 대국민 안정 정책을 발표
- 차우체스쿠 잔당에 의한 테러행위를 중지시키는 것이 사태 수습안의 관건이라는 인식이 『구국전선』 지도부에 의해 인식됨.
  - 차우체스쿠 잔당 진압 방법으로 차우체스쿠에 대한 신속하고 공개적인 재판을 거쳐 처형기로 결정

#### 나. 구체제 핵심세력 청산

- 차우체스쿠 정권의 세 기둥인 당·군·보안기구중 당은 체제붕괴 직전까지 차우체스쿠에게 충성하였으나, 군은 혁명발발 순간 상당수의 고위 장성들이 혁명에 가담하였고, 보안기구는 체제붕괴후에도 테러활동을 계속하면서 저항
  - 공산당의 지도층은 마지막까지 체제 유지를 위하여 노력했으나 이미 수만명의 공산당원들이 혁명에 가담하는 등 공산당 조직이 기층부터 붕괴되면서 자연스런 핵심세력 청산이 이루어짐.

- 혁명과정에서 군의 다수 장성들이 혁명에 가담하면서 고위급 장성에 대한 청산작업이 이루어졌으나 군부내 중·하위 계급에 대한 청산은 혁명이후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
- 세쿠리타테는 ① 25,000명의 정규군 ② 게릴라 훈련을 받은 4,000명 정도의 특수부대 ③ 정보기구 등으로 구성되어, 청산 문제가 복잡하게 전개되었음.
  - 정규군 병력은 12.22 혁명에 가담함으로써 반 차우체스쿠 세력으로 변화하였으나, 특수부대는 정권붕괴후에도 도심지역에서 게릴라 활동을 전개하면서 혁명에 극렬하게 반대
  - 세쿠리타테 정규군은 이미 군에 통합되었으나 특수부대와 정보기구 등은 일리에스쿠의 1989.12.16 포고령 제4호에 의해 정부군에 통합됨으로써 혁명기간중 테러 활동을 전개하였던 세쿠리타테의 잔당들이 합법적으로 신체제 속으로 편입되는 결과 초래
  - 1989.12.30의 포고령 제33호에 의해 세쿠리타테가 공식적으로 해체되면서 정규군에 편입되고, 이에 따른 세쿠리타테의 범죄행위에 대한 조사도 군부에 의해 이루어짐으로써, 세쿠리타테 지도급에 대한 재판은 제대로 성사되지 못함.
  - 세쿠리타테 지도급에 대한 재판도 사령관인 일루이안 블라드 장군과 몇몇 참모에 대해서만 행해졌으나, 죄목도 혁명 이전 4일동안 저질러진 행위에 대해서만 단죄하였지, 차우체스쿠 체제동안 저질러진 행위에 대해서는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 Ⅲ. 신정부 출범후 체제전환 과정

#### 1. 정치적 변화

##### 가. 신정부 출범후 정치동향

- 1989.12.26 구국전선 평의회 주도의 임시정부 수립 및 정·경 개혁 추진
  - 의장 : 이온 일리에스쿠
  - 헌법개정 및 자유총선 실시
  - 공산당 독점폐기 및 다당제 도입
  - 루마니아 사회주의 공화국에서 루마니아로 국호 변경
  - 자유권 및 소수민족 권리 인정
  - 민간기업의 자유로운 활동보장 등
- ※ 좌파성향의 구국전선(구공산계 세력)이 혁명이후 정국을 장악할 수 있었던 이유
  - '89.12월 혁명당시의 주요이슈는 공산주의 타파나 체제와해가 아니라 차우체스쿠 1인 독재에 대한 항의였으므로 후계 세력으로 차우체스쿠 집권당시 제2선에 있던 노멘클라투라가 실세로 대두할 수 있었음.

- 1990.1월말 균등한 국정참여를 요구하는 재야세력의 입장을 반영하여 구국전선 평의회를 자진해체하고 거국 임시 국가단결평의회(Council of National Unity)를 구성
- 1990.5.20 개혁추진 일정에 따라 53년만에 처음으로 자유총선(대통령 및 의회 선거) 실시(투표율: 86.2%)
  - 대통령은 이온 일리에스쿠 구국전선 의장이 85%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되었고 의회 선거도 구국전선이 66.3%의 압도적 승리
  - 폴란드, 동독, 헝가리 총선에서 중도우파 정당들이 승리한 것과는 달리 좌파 성향의 구국전선이 압도적 지지를 획득(구국전선이외의 신 정치세력 부재가 요인)
  - 구국전선(Council of National Salvation Front : NSF)은 구공산당 세력과 안정회구 세력을 지지기반으로 함.

※ 1990.5 총선결과

정당	하원	상원
구국전선	263	92
헝가리 민주동맹	29	12
민족자유당	29	9
환경운동	12	1
민족농민당	12	1
루마니아 통일당	9	2
민주토지당	9	-
환경주의당	8	1
기타	24	1
합계	395	119

○ 1990.6월 광부사태

- 6.11 TV 방송국 노조들이 방송국 신설문제로 단식농성하였으나, 협상결렬로 정부청사 및 방송국 진입 등 시내에 반정부 시위 확산, 89.12월 이래 최악의 유혈 폭력사태로 변하자 6.13 새벽 Jiu Valley 광부들이 부카레스트에 진입, 무력 진압
- 무력진압 과정에서 광부로 위장한 비밀경찰의 조종에 의한 진압이 세간에 알려져, 현 일리에스쿠 대통령의 개혁 추진에 현재까지도 큰 부담으로 작용

○ 반정부 시위 및 반구국전선 시위가 확산되어가는 상황에서 1991.9 탄광 광부주도의 반정부 폭력시위 발생

- 9.26 로만 수상 사퇴
- 10.1 스토로얀 신임수상 임명

※ 스토로얀의 수상임명은 그가 구국전선의 멤버가 아니고, 보수적인 일리에스쿠 진영과는 달리 개혁 노선을 추구하는 로만 전임수상과의 제휴세력이라는 점에서 특이함.

○ 1991.10.16 신내각 출범(스토로얀)

- 구국전선 15명, 국가자유당 3명, 농민당 1명, 환경보존 운동기구 1명

○ 1991.11.21 국회 상·하 합동회의에서 17개월간 토의·심의해온 새 헌법안 절대다수 찬성으로 통과

- 1991.12. 8 국민투표로 새 민주헌법 확정(67.3% 투표율, 77.7% 찬성)
  - 동 헌법은 루마니아 역사상 최초로 민주절차에 의한 민주헌법으로서 큰 의의를 가짐
- 1992. 2. 9 새 헌법에 의거 전국 5천명의 지방단체장 (시·군 이하) 선거 실시
    - 주요 대도시 시장은 야당이 석권(42개 주지사는 중앙정부에서 임명)
    - 91.12월에 농민당(NPP), 민족자유당(NLP), 헝가리 민주동맹(HDUR) 등 18개 정파가 연합하여 결성한 『민주회의』가 동 선거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둠.
  - 1992.4 지속적인 반정부 시위이후 분열조짐을 보이던 구국전선이 지방선거 패배 후유증으로 이온 일리에스쿠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민주구국전선』(보수파)과 피터 로만 당 총재를 중심으로 한 『구국전선』(개혁파)으로 분열됨
  - 1992. 9.27 새 헌법에 의한 임기 4년의 대통령 및 국회 상·하 의원 총선 실시



- 대통령선거 : 현직 대통령인 민주구국전선(DNSF)의 일리에스쿠 후보와 18개 야당연합체인 민주회의(DC) 콘스탄 티네스쿠 후보의 대결인 1차 대통령 선거에서 일리에스쿠가 15% 높은 지지율을 획득하였으나 과반수 득표실패로 91.10.11 2차 결선투표 실시, 2차 결선투표 결과 일리에스쿠가 61:39로 대통령에 재선됨.
- 총선 : 민주구국전선이 제1당이 되었지만 상원 143개 의석 가운데 49석(득표율 35.7%), 하원 328개 의석중 117석 (득표율 34.5%)을 차지함으로써 과반수에 크게 미달

※ 차우체스쿠의 측근으로 공산주의자였다는 경력상의 약점과 개혁에 대한 미온적 태도 견지에도 불구하고 일리에스쿠 대통령이 재선된 이유

- a. 국민들내에 아직 개혁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않아 급진적인 개혁을 주장하는 콘스탄티네스쿠 후보가 큰 호응을 얻지 못함(국민들 사이에 『급진개혁= 인플레이션·실업증가』라는 생각이 아직 팽배)
- b. 국민들의 정치적 무관심이 저조한 투표율로 연결되어 일리에스쿠에게 유리하게 작용
- c. 야당인 민주회의의 콘스탄티네스쿠 후보가 전국적인 인물이 아니었다는 점과 야당이 일리에스쿠의 인기를 너무 과소평가 했음.

※ 1992. 9 총선결과

정당	하원	상원
루마니아 사회민주당	117	49
민주회의	82	34
구국전선	43	18
루마니아 민족통일당	30	14
헝가리 민주동맹	27	12
루마니아당	16	6
사회노동당	12	5
기타	1	5
합계	328	143

- 1993. 3. 4 Vacaroiu수상, 『경제·사회 개혁 프로그램』을 의회에 제출
  - 부가가치세 실시(93.7.1), 정부보조금 폐지(93.5.1)
  - 대외무역 증대를 위한 관세 면제등 관세제도의 정비
  - 사유화 계속 추진·완결
  - 외국투자유치, 대외 차관의 엄격 사용
  - 외교정책
    - EC가입 등 EURO-ATLANTIC 구조 참여노력 계속
    -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중국, 일본 등 국가와 관계 강화

- 1993. 5. 1 기본 식료품과 전기 등 에너지 분야에 대한 정부 보조금 폐지, EC와의 잠정 무역협정 발효
  
- 1993. 9.28 Council of Europe 회원국 가입
  - '89 혁명 이후 국제적 고립 탈피와 특히 구주체제 합류를 최우선 과제로 하여 동기구 가입을 적극 추진, 1991.2월 Special Guest로 된 바 있음.
  
- IMF의 대 루마니아 차관공여 협상
  - 1993.10.21 IMF는 루마니아 '89 혁명 이후 현재까지 IMF의 대 루마니아 공여차관은 효과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오히려 개혁을 막는데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협상 연기
  - 그러나 1993.12.9 IMF와 '94년 경제개혁과 경제안정 및 대외 지불 적자문제 해소를 7억불 차관협정 체결
  
- 1993.11.18 전국 자유노조연맹(CNSRL-FRATIA)이 주관하여 최저임금 인상요구 및 개혁추진 촉구 시위를 벌임
  
- 1994. 3.30 루마니아 대통령, '89년 차우체스쿠 정권말기 반공산주의 항거세력 집단살해 및 권력남용 등으로 체포·복역중인 30여명 최고위 공산당 간부중 8명을 사면 (일부는 이미 병보석으로 가석방)
  - 이로써 차우체스쿠 경호처장만 형 집행중

- 1995. 3. 2 IMF, 루마니아의 『민영화 촉진법안』 의회 추진 지연에 실망, 대 루마니아 제도전환 설비용 차관중 2차분 2.65억 불 지급을 보류
- 1995. 5.24 루마니아 의회, 『민영화촉진법안』 통과

#### 나. 주요 정당현황

- ① 루마니아 사회민주당(PSDR : Party of Social Democracy of Romania) (구 민주구국전선, DNSF)
  - 92년 총선을 둘러싸고 로만에 반대하는 일리에스쿠 대통령 지지세력이 『구국전선』(NSF)을 탈당, 『민주구국전선』을 창설함(92.4)
    - 92.9, 총선에서 제1당이 됨
  - 93.7.10-11, 전당대회에서 사회민주당 등 2개 군소정당과 합당하면서 당명을 루마니아 사회민주당으로 개명
  - 주요정강
    - 사회민주주의를 기본이념으로 점진적 실용주의, 사회복지 확대를 추구
    - 국가의 새로운 역할을 강조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도입
    - 지지기반은 구 공산당 출신과 농촌지역의 장년층

② 민주당(DP : Democratic Party)(구 『구국전선』 NSF)

- 1989.12.22, 창설된 구국위원회가 전신
- 90.5, 총선(지지획득률 66.4%)으로, 여당이 됨.
  - 92.4 일리에스쿠 대통령 지지세력(민주구국전선) 탈당으로 약화
- 92.9, 총선(지지획득을 10.3%) 패배, 야당으로 전락
- 1993.5, 전당대회에서 민주당과 합당, 민주당으로 개명
- 주요정강
  - 중도좌파 성향으로 정치적 다원주의 및 사유화, 지방 분권화 표방
  - 개혁과 민주주의를 통해 보편적 인간의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 건설과 공익의 극대화
  - 루마니아민족 단합을 통한 국가건설과 EURO-ATLANTIC 구조에의 참여

③ 기독교 농민당(NPCDP : National Peasant Christian Democrat Party)

- 1895년 창당, 1947년 해체, 1989.12.25 재창당

- 지지기반은 학생 및 급진 개혁파의 농민
- 주요정강
  - 의회 민주주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도입
  - 농촌재건 등 농업역할 강조, 사유농업 부활

④ 헝가리 민주연맹(DAHR : Democratic Alliance of Hungarians in Romania)

- 1989.12.25 창당, 50만명의 당원과 24개 지구당
- 루마니아 거주 160만 헝가리계 소수민족 권익보호를 위해 헝가리계 지역정당, 문화단체등이 가입
- 주요정강
  - 루마니아내 소수민족의 개인적, 집단적 권리보장 및 언어·문화 등 독자성이 보장되는 자치권 확보
  - 민주화 및 시장경제체제 도입, 유럽통합에의 참여

⑤ 국가연합당(RNUP : Romanian's National Unity Party)

- 루마니아 민족의 통합과 단합을 주장하는 극우 민족주의자 정당으로서 의회에서 여당을 확고히 지지
- 현 의석수 : 상원 13, 하원 29석

- 최근 민주 농민당과 연합을 구성

⑥ 시민연맹당(CAP: Civic Alliance Party)

- 1991.8, 창설, 92.9, 총선에서 상원 12, 하원 13석을 획득하였으나 부총재등 일부 의원이 자유당(Liberal Party 93)으로 이적함에 따라 상원 7석, 하원 5석으로 줄었으며 계속하여 당 분열 조짐이 있음.
- 주요정강 : 신자유주의 사상에 입각, 민주주의 및 복수정당제에 의한 인권보장 및 건전 시민사회 형성

## 2. 경제개혁의 추진

### 가. 경제개혁정책의 기초(점진주의 대 충격요법)

- 1990.5월 루마니아 국립경제연구소가 외국경제학자의 조언을 참고로 작성한 『루마니아에 있어서 시장경제화에 관한 전략개요』에 의하면
  - 루마니아 경제체제가 시장경제체제로 이행해야 하지만 폴란드가 도입한 충격요법과 같은 급진적인 방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점진적 경제개혁이 바람직하다고 지적
  - '90.5, 총선후 부쿠레슈티대학을 중심으로 한 자유화요구 시위와 탄광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시위를 무력진압하자 OECD가 루마니아에 대한 재정지원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해서 동 프로그램은 채택되지 않음.
- 1990.6월말 취임한 로만 신임수상은 선진제국으로부터의 재정지원을 통한 경제제건 방침을 밝히고 당초 경제개혁 프로그램보다는 점진적인 『경제·사회개혁 프로젝트 정비 프로그램』을 채택
  - '90.9~'92.6월동안 경제관리조직, 가격, 재정, 금융, 은행, 통화, 농업, 국영기업 등의 분야에 있어 시장경제로의 이행에 필요한 법제도 정비를 비롯한 제반조치를 실행
  -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보장정책을 병행



※ 로만 정부의 경제개혁 프로그램안 (1990.1~1992.6)

기 간	기업제편 및 사유화	농업개혁	가격자유화와 통화개혁 및 태환성 확보	재정개혁	은행개혁		
1990년 1-10월	· 국가사유화청의 설립 · 국영기업의 전환법 제정, 국영기업의 주식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로의 전환개시 · 국영기업의 자산재평가	· 토지법 제정 · 농지개혁안 작성	· 가격 개혁프로그램 작성 · 레이화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절하와 실질구매력에 따른 환율 결정 (90년 1-12월)	· 재정법 · 회계법 · 법인이윤세 도입	· 은행법제정 · 국립은행의 발권은행으로의 조직개편 · 농업은행, 협동조합은행, 외국무역은행의 상업은행화		
1990년 11-12월	· 회사법 개정 · 국영기업 자산의 30%를 국가사유화청에 이전 · 소유권증서(민영화 쿠폰)의 발행과 배분 · 잔존국유자산에 대한 주식의 발행과 매각개시		· 제1차 가격자유화 실시 · 국영기업에 대한 보조금 삭감	· 1991년도 예산안 작성 · 개인소득세 도입 · 관세법 제정	· 개발은행의 설립 · 저축은행의 조직개편		
1991년 1-3월	· 사유화법 제정	· 농업개혁의 실시	· 제2차 가격자유화 실시 · 1대10으로 화폐단위 변경(91년 1-3월) · 외환법 제정 (91년 1-3월)	· 부가가치세법 제정	· 국내 및 외국자본에 의한 새로운 상업은행의 설립		
1991년 4-6월	· 소유권증서와 주식의 교환개시						
1991년 7-12월						· 제3차 가격자유화 실시(91년 말) · 국영기업에 대한 보조금 폐지 (91년 말)	· 1992년도 예산안 작성 · 종합소득세법 제정
1992년 1-6월						· 단일환율에 의한 레이화의 자발자유화	

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3 루마니아 편람, P128

- 91년 이후 선진제국과 IMF가 루마니아에 재정지원을 재개함에 따라 경제개혁을 주도한 로만수상은 IMF의 전략에 따라서 『점진적인 시장경제로의 이행』 보다 『급진적인 경제개혁』을 단행
  - 일리에스쿠 대통령과 노선차이로 '91.9월말 로만수상 사임
  
- 로만 후임의 스토로얀 내각은 로만내각의 가격자유화 및 국영기업에 대한 보조금 삭감등의 정책을 추진
  - 그러나 이러한 개혁정책은 가격자유화의 영향에 따른 물가의 급상승과 실업률의 증가에 따라 국민들로 부터 비난받음.
  
- 1992. 9월 총선과 대통령 선거에서 시장경제로의 이행속도를 완화시키고 사회보장을 강화할 것을 주장한 일리에스쿠진영이 승리

나. 경제개혁기(1990~ )의 경제 각분야 현황

※ 루마니아의 주요경제지표(1990~1992)

주요 지표	1990	1991	1992
GDP(10억 레이) ①	844.0	2,109.7	5,449.1
공업생산	407.0	919.5	2,462.3
농업생산	152.0	391.2	1,234.4
GDP성장율(%) ②	▲7.3	▲13.7	▲15.4
공업생산	▲16.6	▲20.2	▲22.5
농업생산	10.3	▲4.7	▲8.7
투자증가율(%) ②	2.3	▲0.3	▲23.4
물가상승율(%)	5.1	278	199.2
실업율(%)	1.3	3.0	8.4
무역수지(10억 레이) ③	-96.3	-84.9	-390.0
무역증가율(%) ②	23.2	▲11.1	▲17.1
총외채(100만 달러)	211	1,929	3,360

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3 루마니아 편람, P105

주: ① 정상가격 기준임.

② 전년대비 증가율임. 단, ▲은 감소를 의미함.

③ 경화무역수지 뿐만 아니라 루블무역수지 등도 포함됨.  
 각 해당년도말 국립은행의 공식환율에 따라 레이화로  
 환산된 수치임.

## ○ 물 가

### - 루마니아 소비자물가 변동 (1985~1992)

(단위: 전년대비지수)

산업 부문	1985 ②	1989 ②	1990 ②	1991 ②	1992 ③
평균 ①	129.1	135.4	141.4	374.6	199.2
· 식료품	149.2	163.6	166.6	471.5	219.7
· 비식료품	116.5	121.8	128.2	334.5	189.5
· 서비스	127.7	130.1	136.5	318.2	262.9

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3 루마니아 편람, P115

주: ① 품목군별 가중치는 식료품 0.41, 비식료품 0.44, 서비스 0.15

② 1985년~1991년 통계는 1980년=100으로 한 지수

③ 전년대비 물가상승율

- 각 품목군별 92년 물가동향을 살펴볼때, 91년 월평균치에 비해 92년 12월 물가상승률이 4.8배 상승했는데 이중 식료품은 5.4배, 비식료품은 4.4배, 서비스는 4.3배 상승함.

- 식료품의 물가상승률이 다른 부문에 비해 높았던 이유는 가격자유화 이외에 빵, 고기, 우유 등 기초생활품에 대한 정부보조금의 삭감·철폐 때문임.

## ○ 고 용

- 89년이전 노동력의 이동이 엄격히 제한되었으나, 인구이동의 제정책은 90년 1월 로만정부에 의해 철회됨.

- 루마니아 기업의 고용 및 임금결정체계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각 기업들이 경영상태나 이윤에 입각하여 고용 및 임금수준을 결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 이의 해결을 위해 91.2월 실업수당 지급에 관한 제도를 도입하여 시장원리에 입각한 노동인력 수급조절을 허용함.
- 기업경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고용계약, 노조 및 실업수당 등에 관한 기본 법률의 특징은 노동자의 기존 제반 권리를 보호하는 선에서 시장경제를 도입하고 있다는 점임.

#### ○ 무역

- 루마니아 교역실적
  - 루블화의 결제에 의한 교역이 계속 감소하면서 91년 코메콘의 해체를 계기로 대동구권 교역 거의 중단
  - 무역수지의 적자가 90년이후 지속(무역자유화에 따른 수입 증가와 경쟁력의 상실에 따른 수출 부진에 기인)
- 전체 무역량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하에서도 민간부문 비중은 지속적 증가

#### ○ 외채

- 80년대 내핍에도 불구하고 89년말까지 대부분의 외채를 상환하는 정책에 따라 다른 동구국가에 비해 심각한 상황이 아님.

- 로만 정부하에서 91년이후 IMF의 제안에 따라 안정화 정책의 실시와 경제회복을 위하여 대규모 차관도입

#### 다. 가격자유화

##### ○ 제1차 가격자유화(90.11)

- 3사 이상의 생산업체가 한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를 중심으로 실시
- 생산자가 2사 이하인 제품은 생산자와 경제부의 협의에 따라 가격을 결정
- 77가지 기초 원자재와 중간재는 가격자유화에서 제외하며 고정가격을 유지하되 세계시장 가격에 맞추어서 점차적으로 가격을 인상
- 40가지 기본 소비재는 가격 자유화 보류

※ 제1차 가격자유화에 의해 약 50% 품목의 가격이 자유화됨

##### ○ 제2차 가격자유화(91.4)

- 91.1월 예정되었으나 제1차 가격자유화에 의한 인플레이션과 에너지 부족으로 인한 공업생산의 현저한 감소우려로 91.4월로 연기

- 제1차와는 달리 생산자의 수에 따라 가격자유화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자유화 범위를 전체품목의 80%까지 대폭 확대

○ 정부보조금의 삭감 단행

- 제1.2차 가격자유화후 루마니아 정부는 정부보조금 지급대상 품목을 가정용 에너지, 빵, 사탕, 학용품 등 14품목으로 축소
- 92년이후 이들 품목에 대한 보조금을 분기마다 25%씩 추가적으로 삭감하여 최종적으로 철폐하는 정책 추진
- 특히 정부보조금 지급대상 14개 품목중 7개 품목에 대해서 92.5월과 9월 두차례에 걸친 보조금 삭감에 의해 보조금 지급이 전면 중지됨.

○ 가격자유화 및 보조금 삭감의 결과

- 90.11월 이후 식료품 가격의 경우 가격자유화 이전보다 10배 이상 상승하는 등 극심한 물가상승
-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경제안정화 정책의 결과 92.4월 이후 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한자리로 진정되는 기미를 보였으나, 92.6월이후 레이화의 평가절하와 추가적인 보조금 삭감은 물가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라. 환율의 단일화와 레이화의 내적 태환성 보장

○ 환율의 단일화

(Lei : \$)

구분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상업환율	14.56	14.28	14.92	22.43	76.39	307.95
비상업환율	9.76	8.75	8.99	-	-	-

출처: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 90.2월 기존의 복수환율제가 20.60:1의 환율로 단일화됨
- 단일화된 공식환율이 지속적으로 평가절하되었지만 그 절하폭이 암거래시장에서 거래되는 환율과 상당한 차이를 보임.(암시장에서 레이화의 환율은 중앙은행의 공식환율보다 더욱 상승)

○ 레이화의 내적 태환성 보장

- 92. 2 기업에 대하여 은행에서 레이화를 외환으로 교환해 주기 시작함.
- 91. 8 외환교환소에서 개인에게 레이화를 외환으로 교환해 주기 시작함.
- 91.11 에너지 수입을 위한 외환의 부족에 대해 루마니아 정부는 기업이 보유한 외환창구를 봉쇄하고 기업보유 외환을 강제 흡수



- 92. 5 신외환규제 정책에 따라 다시 기업의 외환구좌의 보유를 인정

※ 레이화의 태환성 유지는 주로 국내기업과 외국에 여행하는 루마니아인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태환화가 유지되고 있지만, 대외적인 측면에서는 외환부족으로 태환화가 유지되고 있지 못하고 있음.

- 급격한 레이화 평화절하는 에너지, 식품 수입증가에 따라 물가 상승의 주요인으로 작용
  - 환율정책은 은행간 Action에 의해 결정되나 외환수요에 절대 부족
  - IMF가 차관공여 조건으로 환율자유화를 요구함에 따라 레이화의 평가절하는 계속될 전망

#### 마. 긴축재정과 세제개혁

- 잇따른 가격자유화와 레이화의 평가절하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긴축재정정책 실시
  - IMF의 권고에 기초하여 연간 재정적자는 다른 동구제국에 비해 엄격한 GDP의 2%이내로 억제
  - 재정적자의 GDP에 대한 비율이 낮게 된 이유는 루마니아 정부가 예산의 집행규모를 대폭 축소하였기 때문임.

- 가능한한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지양하고 기업 자체의 자구노력의 강화와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을 유도하여 예산 집행규모를 축소
-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에 필요한 재정수입을 확보하고 기존의 복잡하고 비합리적인 조세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세제개혁 실시
  - 이윤세 : 각 개별기업의 총수입에 일정비율로 부과되었던 이윤세는 1991년에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절감한 이윤에 대해 누진적으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편됨.
  - 개인소득세 : 90년까지 기업의 임금지급액(임금기금)에 대해 부과되었던 임금세는 91년부터 피고용자들에게 지불된 개인소득에 대해 누진적으로 부과하는 개인소득세로 개편
  - 상품유통세 : 91년까지 간접세로서 상품유통세가 소비재와 건축자재, 석유, 천연가스등에 부과되었으나, 92년부터 수출품을 제외한 모든 국내 최종소비재와 서비스에 대해 부과하여 과세범위를 확대
  -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조세혜택: 외국인 합작기업이 생산설비의 확충을 위해 수입하는 각종 기계장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관세면제 혜택 부여, 사업개시 2년 동안은 기계장비 외에 생산에 필요한 각종 물품에 대해서도 관세면제 혜택 부여 등 각종 면세 및 조세감면 혜택 부여

## 바. 금융제도의 개혁

### ○ 1990 가을, 중앙은행법과 신은행법 제정

- 중앙은행의 기구 및 조직의 개편과 역할조정(발권 및 금융정책 업무 전담)
- 상업은행은 설립시 중앙은행의 승인외에 자유로운 영업활동이 보장됨(중앙은행의 지점에서 독립하여 설립)
- 외국은행 및 외국인 합작은행의 설립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부동산과 지분의 20% 소유 허용

### ○ 금융제도의 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

- 부실채권의 정리와 상업은행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매년 예산의 목표 예산적자액 한도내에서 상업은행의 재무구조 개선 자금을 지원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이윤세의 혜택을 부여
- 은행들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국제금융기관의 안정화지침의 준수 의무 강화, 신용평가 제도를 도입
- 국영상업은행에 대한 특혜폐지와 자유경쟁의 유도
- 금융거래 및 결제의 현대화를 위해 금융의 전산 및 네트워크화 지원
- 금융서비스의 다양화와 시장확대를 위해 국영보험회사의 적극적인 민영화 추진

- 투자은행과 연금·상호기금(Mutual Fund)의 통합과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민간자산기금 (Private Property Fund)을 설립

○ 금융정책 현황

- 경제안정화를 위한 긴축금융정책 실시
  - 92.4월 중앙은행은 명목이자율을 80%로 대폭 인상하여 물가상승률보다 높게 책정
  - 고 이자율에 따른 긴축금융정책이 경기회복에 큰 걸림돌로 작용함에 따라 92.12월 명목이자율을 다시 70%로 인하
- 중앙은행의 상업은행에 대한 대출한도 규제
  - 각종 금융규제 완화조치에도 불구하고 국내자금의 부족현상을 감안, 대출한도 계속 규제

## 사. 사유화 정책

### 1) 사유화 관련 법제

- 국영기업 구조조정법(90.8.8), 기업법(90.11.17), 국영기업사유화법(91.8.14), 외국인 투자법(91.4.3), 토지법(91.2.19) 등 사유화 관련 법제의 정비
  - 국영기업 구조조정법 : 국영기업중 약 53%에 해당하는 기업은 주식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전환(상업화)하고 나머지 47%는 국가가 계속 통제하지만 기업가와 종업원에게 경영권을 부여(자주관리체제)
  - 기업법·외국인 투자법 : 루마니아 내국인 또는 외국인 투자자의 기업설립 및 양자간 합자회사의 설립 등을 허용
  - 국영기업 사유화법 : 기존 국영기업의 자산에 대한 민간으로의 이전을 허용

### 2) 사유화 전략

- 토지, 주택, 국영기업 등 3가지 부문에서 추진
- 토지 : 전체 경작지중 80%인 8.4백만 ha가 사유화 대상 (토지법 '91)
  - 구소유주나 상속자에게 반환하고 그외의 토지는 협동농장 소속원들에 분배

- 사유화 대상지중 80%가 약 500만 개인에 반환
  - 실제 토지증서를 부여받은 사람은 약 10%인 50만명에 불과(95년말 완료)
  - 10ha가 상한선이며 미경작지에 대해선 제제

○ 주택 : 7.6백만호중 약 6백만호가 사유화

- 현 임차인에게 매각, 국유화 주택의 과거 소유주에게 반환

○ 국영기업의 사유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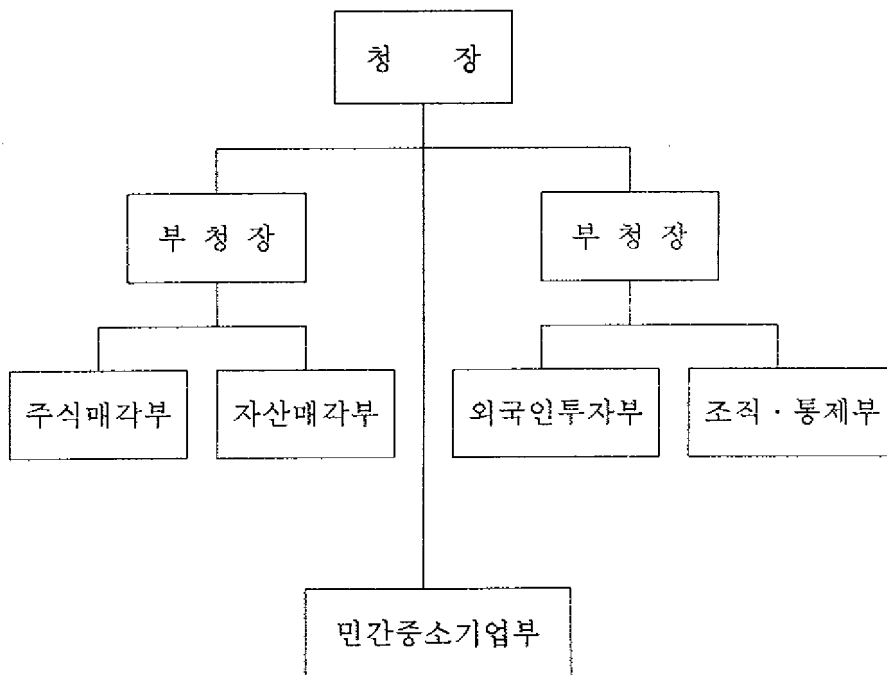
- 92년 중반 루마니아 정부가 발표한 사유화 프로그램에 따르면 6,280개의 사유화 대상기업을 자산규모에 따라 3가지로 분류한 다음 각각 다른 방법에 의한 사유화 추진
- 소규모 국영기업 : 주로 기업가와 종업원에게 자산을 매각하는 방법에 의함. 소규모 국영기업의 사유화에 대한 관리감독은 국가소유권기금의 위임을 받은 각 지방국가사유화청이 주관
- 자산규모가 5,000억~1조 레인인 중간규모의 국영기업 : 국가소유권기금의 위임하에 민간소유권기금이 사유화를 주도
- 대규모 국영기업 : 국가소유권 기금의 주도하에 사유화

※ 소규모 국영기업을 우선적으로 사유화

### 3) 사유화 관련기구

#### ○ 국가사유화청(National Agency for Privatization)

- 사유화 대상기업의 설정 및 공시, 사유화 일정의 제시, 사유화 허가 등 전반적인 사유화정책 및 프로그램을 관리·감독
- 국가소유권기금과 민간소유권기금의 위상과 이들 기금에 대한 규정을 작성하여 정부와 의회의 승인을 거쳐 이들 기금을 설립
- 조 직



○ 국가소유권기금(State Ownership Fund)

- 대규모 국영기업의 사유화
- 재무부 등 기존 개별 정부부처가 소유하였던 국영기업의 경영권 인수
- 매년 사유화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
- 민간소유권기금과의 협력을 통해 사유화에 관한 제반조치를 강구하고 필요시에는 국영기업을 재편하거나 해체
- 국영기업의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영기업의 대표를 주주총회에서 임명

○ 민간소유권기금(Private Ownership Fund)

- 중규모 국영기업의 사유화
- 인수한 기업의 자산을 소유권증서(Certificate of Ownership)를 소지하고 있는 시민에게 무상배분 (대중적 사유화)
- 사유화를 가속화하기 위한 제반조치 강구
- 부크레슈티, 아라드, 바카우, 브라소브, 크라이오바 5개 지역 소재



#### 4) 국영기업 사유화 방법

##### ○ 국영기업의 상업화(Commercialization)

- 국영기업을 주식회사나 유한책임회사 등 상업기업(commercial company)으로 전환
- 상업기업으로 전환된 기업의 소유권은 여전히 국가에 있기 때문에 상업화는 사유화의 전단계에 불과

##### ○ 경영자·노동자 인수매각 제도(Management Employee Buy-Out : MEBO)

- 매각대상기업의 경영자나 노동자였던 사람이 해당기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수하고자 할 경우 인수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제도
- 기존 경영진과 노동자가 기업의 동질성과 독립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
- 2,600여개 소규모 기업중 400여 기업이상이 MEBO 방식에 의해 우선 사유화됨('94.6월 현재)
- '94 여름에 의회를 통과한 MEBO 법에는 매각의 조건에 관한 다음의 규정이 있음.
  - 매입자는 평가가격의 20% 한도내에서 증액 가능
  - 최대 10%의 이자율로 5년간 대부 가능
  - 매입기업에 대한 이윤세 감면

○ 대중적 사유화(Mass Privatization)

- 민간소유권기금(POF)이 인수한 기업의 자산을 소유권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시민에게 무상 배분
- 대상기업은 3,000개의 중규모 국영기업
- 대중적 사유화 과정
  - a. 소유권증서의 배분 : 국가사유화청은 사유화 대상기업의 주식과 교환될 수 있는 소유권증서를 발행하여 18세 이상 루마니아 시민에게 무상 배분(사유화 대상기업 전체시장가의 30%에 해당하는 소유권증서 배분)
  - b. 주식배분 : 민간소유권기금은 보유하고 있는 사유화 대상기업의 자산을 주식의 형태로 소유권증서를 소지한 루마니아 시민에게 배분(상업기업의 60% 주식은 소유권증서에 의해 획득 가능하며, 나머지 40% 주식은 현금에 의해야 함)
- 소유권증서는 타인에게 매각할 수 있으며, 계속 보유할 경우에는 민간소유권기금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음.  
한편 외국인투자자는 소유권증서를 매입할 수 없음.

※ 대중적 사유화 방식의 장·단점

- 장점 : 사회정의 및 형평의 차원에서 모든 국민들에게 국가 및 공공재산을 평등하게 분배
- 단점 : ① 소유권의 분산으로 인한 기업경영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경제적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없음.

- ② 최소한의 주식시장의 존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국가에서는 동  
방식 사용의 어려움.

5) 사유화 추진 실적

(’94.6월 현재)

구 분	갯 수	고용인수	사유화실적
소규모 국영기업	3,124	497,000	470
중규모 국영기업	2,459	1,754,000	53
대규모 국영기업	708	1,790,000	4
합 계	6,291	4,041,000	527

출처: Romania Economic Newsletter, '94 7-9월, Vol.4 No. 2

○ 사유화 실적이 부진한 이유

- 대기업 사유화의 경우 기득권자의 이해가 대립되어 쉽게 진척  
되지 못하고 있음.
- 국내에 축적된 자본이 미비하기 때문에 공공매각 대신 대중적  
사유화 방식에 주로 의존해야만 함.
- 사유화대상 기업의 『자산평가문제』 : 자본주의적 회계시스  
템의 불비로 사유화 대상기업의 자산평가를 주로 외국인 자문  
회사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며, 이것은 또 다른 비용으로 사  
유화를 어렵게 하고 있음.

## IV. 루마니아 혁명·체제전환 평가

### 1. 혁명·체제전환 사례비교

#### 가. '89 동구혁명의 원인

- 동구국가들의 혁명 및 체제전환 과정은 각국 상황에 따라 상이하지만 혁명의 원인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점에서 공통점이 있음.
  - 대내적으로 ① 구체제의 정통성 결여  
② 산업화 전략으로서 소련모델의 문제점
  - 대외적으로 ③ 서방의 대동구 차별화 정책  
④ 고르바췌프의 등장
- 구체제의 정통성 결여
  - 2차대전 이후 동구에 수립된 공산정권은 유고슬라비아, 알바니아를 제외하면 소련에 의해 강제이식된 정권임.
  - 민주적 중앙집중제에 의한 일당독제는 진정한 정치참여를 배제하고 당과 국가의 관료화를 초래

○ 산업화 전략으로서 소련모델의 문제점

- 계획경제, 중공업과 군수산업의 중시, 농업집단지화 등에 따른 경제적 비능률성과 산업구조의 왜곡

○ 서방의 동구 차별화 정책

- 가능한 한 동구를 소련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국내적 자유화와 외교정책의 자주성을 보이는 동구국가에 대해서는 최혜국 대우를 부여하는 등 차별적으로 대우
- 그 결과 소련외교정책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어느정도의 자주성을 보여온 루마니아와 보다 온건한 방식으로 통치하며 국내적으로 어느정도 인권존중 태도를 보여온 헝가리가 이 정책의 혜택을 입음.

○ 고르바췌프의 등장

- 이전의 사회주의적 국제주의와 브레즈네프 독트린을 폐기하고 신사고에 입각한 사회주의체제 개혁·개방정책 추진

나. 고르바췌프 개혁에 대한 동구권 반응의 차이

- 고르바췌프 개혁에 대해 동구국들이 보인 반응은 다음의 세가지로 분류됨.

- 폴란드와 헝가리는 자국의 개혁을 계속하기 위해 소련의 개혁을 적극 지지
- 동독과 루마니아는 페레스트로이카를 거부하고 자신들의 방식을 고수
- 불가리아와 체코슬로바키아는 마지못해 동조하며 피상적이고 장식에 불과한 개혁을 시도

※ 동구권국가들의 고르바초프 개혁에 대한 거부의 강도는 “루마니아 - 동독 - 체코 - 불가리아 - 헝가리·폴란드” 순서로 나열될 수 있을것임.

- '89년에 발생한 혁명의 순서는 동독의 경우를 예외로 할때 대개 이 순서의 역순이 됨

#### ○ 폴란드

- 이미 고르바초프 등장 이전에 사회주의국가 최초로 자유노조가 설립됨.
- '81년 계엄령의 선포로 자유노조가 불법화되고, 군사정권이 수립된 후 경제개혁을 추진하였으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정치·경제적 위기가 지속됨.
- 위기상황하에서 세력이 신장된 개혁파는 국민과의 타협을 추진하기 위해서 고르바초프의 개혁을 적극 수용

## ○ 헝가리

- 카다르정권하 '68년부터 실시된 신경제메카니즘 개혁은 동구에서 가장 폭넓고 지속적인 개혁이었으나 국제경기의 후퇴와 함께 경제적 위기에 직면함.
- '88.5월 임시당대회에서 개혁파 지식인의 지지를 얻고 카다르를 축출한 그로쓰는 경제개혁의 가속화와 제한된 정치개혁을 위해 고르바초프의 개혁을 적극 지지

## ○ 체코슬로바키아

- '68년 “프라하의 봄” 으로부터 개혁의 위협을 인식한 후사크가 완강한 개혁거부의 태도를 보임
- 고르바초프 등장이후 스트루갈 수상등은 소련 개혁에 동조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소수파에 불과했음
- '87년 후사크를 계승한 야케스도 후사크의 보수정책을 그대로 추종하며 고르바초프 노선을 따르지 않았음

## ○ 동 독

- 사회주의진영국가 가운데 가장 발전된 국가였던 동독은 자국의 정치·경제체제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 루마니아

- 60년대부터 외교분야의 독자노선을 선언하고, 국내적으로 족벌체제와 자급자족주의에 기초한 스탈린식 공업화전략 견지
- 차우체스쿠에게 있어서 고르바초프의 개혁은 자신의 개인승배에 기초한 체제를 붕괴시킬 위험을 가진 것이었으므로 철저히 거리를 유지

다. 혁명의 전개과정상의 차이

○ 폴란드

- 자유노조에 제한된 권한을 부여하되 책임을 공유하고자 하는 정권의 의도와 일단 합법화의 단계를 거치려는 자유노조간의 이해가 일치하여 89년 2-4월에 걸친 '원탁협상' 에서 선거실시에 합의
- '89.6월에 실시된 선거에서 하원의 460석 가운데 공개경쟁이 이루어진 161석 모두를 자유노조가 지원한 시민위원회가 석권
- 이에따라 비공산 계열이 주도하는 정권이 등장

○ 헝가리

- '88년 임시당대회이후 점차 세력이 확장된 개혁파는 민주진영과의 타협 추진



- '89년 6-9월동안 진행된 '원탁협상' 에서 개혁파와 민주진영은 완전자유선거에 동의
- 이 타협이후 개혁파는 사회노동당을 혁신하여 새로이 사회당을 출범시킴

#### ○ 체코슬로바키아

- '89.11.17일의 대규모 시위이후 하벨을 중심으로한 77헌장 주요인사들은 『시민포럼』을 결성하였고, 베를린장벽의 붕괴('89.11.9)로 소련의 지지가 없을 것임을 확인한 당은 이들과 타협할 수 밖에 없었음
- 12.10일 비공산계를 다수로 하는 연정이 수립되었고, 68년이후 독점체제를 유지해온 후사크가 대통령직을 물러남
- 12월말 하벨이 의회에서 대통령에 선출되고, “프라하의 봄”의 상징이던 두브체크가 국회의장으로 선출됨

#### ○ 동 독

- 주민들의 '89년 여름 인접국을 통한 집단이주"(exit)", '89.10월 라이프찌히를 중심으로 전국으로 확산된 군중데모"(voice)"로 또다른 천안문사태의 발생을 원치 않았던 당지도부와 소련에 의해 호네커 축출

- 다른 동구권 국가와 달리 분단국가였기 때문에, 동독주민은 서독체제를 대안으로 선택
- 베를린장벽 붕괴로 『실질적인 통일』이 달성되었고, 동독에서 자유총선이후 출범한 신정부와 서독정부의 협상에 의해 『화폐·경제적 통일』과 『법적·국가적 통일』이 달성되었으며, 그 이후 현재까지 『내적통일』과정이 진행중임

#### ○ 루마니아

- '89 동구혁명 가운데 유일하게 유혈혁명이 발생함.
- 헝가리게 소수민족의 저항에서 촉발된 전국적인 민중시위를 친정부적인 군중동원으로 봉쇄하려던 차우체스쿠의 시도가 수포로 돌아간 후, 그에게 충성하는 세쿠리타테와 민중의 편으로 돌아선 정규군 사이의 전투 계속
- 차우체스쿠와 엘레나가 처형된 후 좌파성향의 구국전선을 중심으로 신정권 출현

### 라. 동구 각국 『시민사회 활성화 정도』의 차이

#### ○ 폴란드

- '76년에 노동자수호위원회가 출현하여 '80년 『자유노조』로 발전하였는데, 자유노조는 동구국가중 가장 활성화된 시민사회의 예를 보여주었고 광범위한 대중, 교회, 노동자, 지식인의 지지를 얻었음

- '81.12월 계엄선포로 자유노조는 불법화되었으나 그 지도인사들은 여전히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었고, '88년에 다시 부활하게 되었음

#### ○ 헝가리

- '68년 경제개혁 조치이후 성장한 『제2경제』(중앙의 계획과 통제를 벗어난 암시장적 성격의 경제 양식)는 시민사회의 활성화에 기여해 왔음
- 80~81년의 폴란드사태에 영향을 받은 헝가리에서는 『사미즈다트』(지하신문 운동)와 소위 『날아다니는 대학』(flying universities)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민주화 요구와 정보의 확산이 도모되었음
- 반체제 지식인 중심의 군중시위(1848혁명 기념시위, 1956년사태 기념시위, 반소시위 등)에 대하여 정부당국은 탄압정책을 고수했으나, '88년 루마니아의 헝가리 소수민족 탄압에 항의하는 약 3만명의 군중집회에 대하여는 방조하는 태도를 취하였음.

#### ○ 체코슬로바키아

- 공산화 이전에는 다른 동구 어느나라보다도 시민사회의 전통이 강했고, 국내 반체제세력에 의한 『77헌장』과 같은 인권운동의 움직임과 활발한 『사미즈다트』 활동이 존재하였음
- 77헌장 그룹의 영향은 지식인과 청년층에 국한되어 있었으나, '89.11월에는 노동자들까지 가세함으로써 바로소 『시민포럼』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음

○ 동독, 루마니아 등

- 동독의 경우 루터파 개신교의 영향력이 있었으나 반체제 세력을 결집시킬 만큼 중심역할을 하지는 못하였음
- 루마니아의 경우는 동구국가중 당에 대한 시민의 반대가 가장 미미하였으며 혁명전까지 당의 응집력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음
- 시민사회의 활성화가 상대적으로 약했던 이 국가들에서는 '89 혁명이 협상보다는 『거리정치』로 특징지워짐

마. 혁명직후 등장한 정권의 성격상 차이

- 혁명이후 폴란드, 체코, 헝가리 등 이른바 중부국가에서는 공산당의 실제적인 붕괴가 일어났고 공산당원수도 거의 80%나 감소한 반면,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의 공산당원수 감소는 상대적으로 미미했음
- 혁명이후 실시된 선거에서의 의회의석수를 볼때 구공산당을 계승한 정당들은 동독의 민주사회당이 16.5%, 체코 공산당이 15.6%, 헝가리 사회당이 8.5% 획득하는데 그친 반면, 루마니아의 구국전선은 68.9%, 불가리아 사회당은 52.7%를 획득
-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에서는 구공산세력이 여전히 지배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경제적·사회적 변화에 있어서는 중구국가에 비해 뒤져 있음.

- 위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동구의 혁명·체제전환 과정은 중부유럽형과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 동부유럽형으로 유형화시킬 수 있으나, 오늘날 동구에서는 보편성이 더 커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에서 민주이행과 시장경제로의 전환이 제한된 정도나마 성과를 보이고 있고,
- 중부유럽형으로 앞선 모습을 보여주던 폴란드, 헝가리 등에서 구공산당이 재집권함으로써 개혁속도가 둔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함.

## 2. 북한과 루마니아의 유사점·차이점

### 가. 북한과 루마니아의 유사점

- 장기집권, 개인숭배, 족벌체제와 정권의 세습시도, 민족주의 (자주성의 강조), 폐쇄체제, 자급자족적 경제, 인권탄압, 경제위기 등 루마니아의 차우체스쿠 정권은 북한과 흡사한 점이 많았음.
- 1971년 차우체스쿠가 북한을 방문한 이후 위에서 서술된 루마니아 공산주의의 특징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함.
- 김일성과 차우체스쿠는 비슷한 조건을 공유한 까닭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음.

- 2차대전 종전 이전에는 국내정치적 기반을 거의 가지고 있지 못하던 공산당이 소련군의 진주와 함께 정치적 주도세력으로 등장하고, 당세력이 급속하게 팽창했던 점도 유사함
- 양국은 공히 경제적 낙후성에 대한 강박관념으로 『스탈린식 공업화 전략』을 채택하여 급속한 공업화를 추구한 결과 50~60년대에 걸쳐 대단히 빠른 성장속도를 유지했음
  - 스탈린식 공업화 전략은 부족한 자원의 배분에 대한 엄격한 통제, 자원을 극도로 동원하기 위한 장치의 건설과 운영(특히 노동력의 통제와 동원적 이용), 그에 따른 주민의 불만을 통제해야 하는 과제를 수반하였음.
- 특히 '56년 흐루시초프의 등장 이후 소련공산당은 경제적으로 급속한 공업화 전략과 농업집단지화 전략을 완화할 것, 정치적으로 집단지도체제를 요구했으나,
  - 북한과 루마니아는 흐루시초프의 탈스탈린화 요구를 거부하고 『탈소련화』 노선을 추구했음
- 또한 북한과 루마니아는 70년대 이후 노동력의 동원을 통한 외연적 경제성장 전략의 한계가 드러남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급격하게 둔화되기 시작하였고, 이의 해결을 위해
  - 노동에 대한 사상적 자극 및 군대식 동원(속도전 전개)을 강조하고,

- 의사결정권의 최고정점 인물에의 집중, 경제관리의 중앙집권 강화를 추구했음
- 특히 양국의 지도자들은 탈소련화과정을 거치면서 『민족주의』를 두드러지게 강조했음
  - 정통성 건설과 역사서술에서 애초에는 소련, 소련공산당, 마르크스 - 레닌주의가 압도적이었던 것에 대신하여 국가역사와 공산당 역사가 집권파벌을 중심으로 재구성됨
  - 민족주의의 강조를 통해 정권에 반대하는 것은 국가의 자주성에 대해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게 함으로써 체제 안정화의 도구로 이용함
- 생필품난 등으로 인한 일반대중의 불만을 통제하기 위하여 『억압기구』와 『감시망』을 철저히 이용하고 어떠한 종류의 정치적 대화도 근본적으로 어렵게 함으로써 사회를 극도로 원자화시켜, 대항엘리트의 형성을 철저히 차단했음
- 물질적 희생과 엄격한 규율의 준수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내부와 외부의 갖가지 적들과의 『환상적 투쟁』 상태의 지속적 유지를 추구했음
  - 북한은 남한과의 대치상황, 미제국주의의 사회주의에 대한 위협을 강조했으며,

- 루마니아는 헝가리가 (루마니아의 영토인) 트란실바니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러시아인들이 내정간섭을 하려하고있다는 등의 『포위감』을 조장하였음

○ 그러나 양국에서 공히 경제성장 전략의 실패에 따른 『주민의 궁핍화』 현상은 저항을 촉발시키기 보다는 역설적으로 주민의 정치의식 마비를 극대화시켰음

※ 양국에서 공히 주민의 경제적 희생, 정치적 부자유가 만연했음에도 장기적으로 외형적인 정권유지가 가능했던 이유는

- ① 대외정치적 자주성 강조 (민족주의)
- ② 권력의 극도 중앙집권화 (개인숭배)
- ③ 억압기구와 포괄적 감시망에 따른 저항의 무력화
- ④ 빈곤으로 인한 주민들의 정치의식 마비
- ⑤ 끊임없는 국가적 위기감 조장 등 때문임.

#### 나. 북한과 루마니아의 차이점

○ 루마니아는 물리적 억압기구를 중심으로 주민들을 통제하였으나, 북한은 물리적 억압기구와 더불어 이념적 억압기구를 주민 통제에 적절히 활용하고 있음.



- 루마니아에는 체제에 순응적이었다고는 하나 종교를 중심으로 사회조직이 존재하였으나, 북한의 종교는 전시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여타 사회조직도 부재함.
  - 루마니아 사태의 시작은 개신교 목사의 탄압에서 촉발되었음.
  
- 루마니아는 인종문제를 갖고 있었으나, 북한은 단일민족으로 이루어져 통합성이 상대적으로 높음.
  
- 지정학적으로 루마니아는 외부세계와의 완벽한 고립이 불가능하였으나, 북한은 인적·물적 차원에서 고립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음.
  - 주민들에 대한 정보통제도 북한이 상대적으로 유리함.